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첫발



**최형기**  
산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장

## 국제표준 반영 KS규격 마련...범정부 위원회서 시스템 통일 노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신화학물질이 만들어져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재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과 표지(Labeling) 방식이 서로 달라 수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을 통일하고 각국의 관련 법령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방법도 부처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생산자, 운송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7개 부처에서 대상물질·기능별로 분류하고 표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통일 시급

유엔에서는 10여년의 작업 기간을 거쳐 2003년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개발,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국에 통보했다. 전세계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GHS 개발의 취지다. 말 그대로 세계 각국이 조화롭게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GHS는 화학물질을 물리·건강·환경 유해성에 따라 2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9개의 그림문자로 유해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호어(위험, 경고 등) 및 유해·위험 문구(‘암을 일으킬 수 있음’ 등)를 표기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류된 화학물질은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이르기 까지 생산자, 운송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화학물질 취급 전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유엔, 화학물질 안전관리 국제표준(GHS) 개발·보급

유엔에서 제정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의 국내 도입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화학물질 수출입시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르게 운영돼 오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GHS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노동부·환경부·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모인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통일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금까지 9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GHS 지침서의 국내 도입 방안과 부처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입어 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연내 개정하고 부처 중 처음으로 2008년부터 GHS에 따

른 화학물질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농림부 등도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도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방법을 이번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해 각 부처에서 GHS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S규격이 제정되면 각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시 KS 규격을 따르도록 법령에 규정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 국제표준 반영한 KS규격 제정

GHS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가 힘겨루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논의의 장이다. 그간 각 부처는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결국 통일된 의견을 도출해왔다.



GHS는 단순히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표지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용, 운송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각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통일된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GHS 시스템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소비자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하루속히 익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향후 과제다.

이번 KS규격 제정을 첫걸음으로 각 부처가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면 우리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세계 7위 화학 산업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기대해본다.